

21세기,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

안전·보건분야에서 『새로운 천년』의 의미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세기, 새천년이 시작되었

다.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지어 새 천년을 굳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설렘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모른다.

21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화에 토대를 둔 지식기반경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지식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였으나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지식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경쟁의 가열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경쟁의 내용 또한 '비용경쟁', '품질경쟁'을 넘어 '정보경쟁', '속도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입고 먹고 자는 것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더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인간애, 생명의 중요성은 변화될 수 없는 기본일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근로자의 확보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인적자원의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에는 노사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안전보건을 이룩하여 21세기 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안전의식과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노사자율'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아프게 했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대형사고의 궁극적인 원인은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인간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는 전국민적 안전의식의 정착이 2000년대 의식개혁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차원에서도 최고경영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때 근로자 역시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사 자율에 의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주요 안전보건문제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사업장 감독 및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차여와 협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안전분야가 바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한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장관 이상룡

안전·보건제도를 고객 중심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50년대 근로기준법을 효시로 안전·보건제도가 태동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특정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법령과 조직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관련 제도가 여러 법령에 산재하게 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안전·보건의 수혜자인 “근로자”와 주요 의무주체인 “사업주”, 이 두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법령이 사람이 아닌 전기, 가스 등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장내 안전관리 조직, 검사, 교육 등 주요 안전관리제도를 통합·일원화할 수 있는 단일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고객중심의 행정을 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노력이 다가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보건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과 민감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율리 자원과 기술이 열악하여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자원배분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영세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인 원청업체의 지원노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새천년에는 고객, 즉 근로자와 사업주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요구에 맞춰 나가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2000년대 일류 안전국가의 비전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에 정부에서는 '99.12.22 새천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의식, 관행 및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 하였다.

이 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안전·보건 발전 전략계획으로 '99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노·사는 물론 안전·보건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여명을 담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산업재해의 예방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노·사 및 재해예방단체, 학계 등의 재해예방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재해예방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노·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천년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함과 동시에 많은 도전과 꿈을 요구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존중되는 가운데 이들의 능력 개발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명존중은 기업경영과 국가운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도 “풍요롭고 안전할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천년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요 맞기 보다는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천년 첫해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려본다.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안전 의식과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노사자율'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제도를 고객 중심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일류 안전국가의 비전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